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와 북한의 경제노선 변화 연구

공격적 발전전략에서 수세적 방어전략으로의 전환

정현숙(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주의완전승리’ 테제(이하 테제)와 경제노선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정책비교 방법으로서 ‘대안체계’와 ‘7·1 조치’를 다루었다. 분석결과 테제는 주체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안보에서의 자위’를 대전제로,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가 전략적 가치로 구성된 사회주의 발전전략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기에는 공격적 발전전략으로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지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었으며, 탈냉전기에는 선군사상으로 재구성되어 수세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정치적 측면에서 ‘수령제당국가 사회주의정치체제’는 고수된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계획과 시장공존’의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 ‘가치법칙’, ‘대안의 사업체계’, ‘경제-국방병진노선’, ‘선군경제노선’, ‘7·1경제관리 개선조치’, ‘국가주도 계획시장경제’

1. 서론

마르크스가 규정한 역사발전 5단계에는 사회주의가 없다. 사회주의는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불완전한 과정으로 묘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회주의를 과정적 시기, 즉 ‘과도기’라 한다. 공산주의는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사명으로 하는 ‘과도기로서 사회주의’는 태생적으로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목표로 추구한다. 이러한 정의는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완전승리’는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을 ‘과도기’라 하며, 과도기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과도기적 과제’라 한다. 북한의 과도기는 1947년에 시작되었다. 과도기의 첫 번째 과제인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은 1950년대에 대부분 완수되었다.¹⁾ 북한에서 제도개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중요한 난제이자 장기적 과제는 식민지적 유제(遺制)와 자본주의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과도기의 사명에 따른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67년 5월 25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제시하였다. 테제가 제시한 과제는 ① 농촌에서의 기술, 사상, 문화혁명 수행, ②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화, ③ 노동자-농민간 격차 해소, ④ 중산층 쟁취를 통한 사회주의 완전 승리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것이고, 당

1) 서유석,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과도기론’에 대한 재인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상반기호(2007), 286~300쪽.

면한 목표는 생산력 발전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해 김일성이 제시한 내용과 전면적으로 일치한다.²⁾ 즉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최초에는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³⁾으로 제시되었지만, 이후 진행과정에서 총 노선으로서의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원형테제(이하 테제)’라고 명명한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는 북한의 설명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테제는 첫째,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밝히고 있다. 둘째, 농촌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지침이다.⁴⁾ 즉, 테제는 현재(現在)의 과도기 임무를 주된 과제로 하면서, 미래(未來)의 공산주의의 상(象)을 디자인한 설계도에 해당된다.

냉전기 테제는 주체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로 발전하면서 체계화되었다. 탈냉전기에는 선군사상을 토대로 선군정치, 선군외교, 선군경제노선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테제는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어떻게

2) 김일성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적 임무완수’로 정의하였다.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1권(평양: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1983), 264~271쪽.

3)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기술 혁명과업을 철저히 실현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40권(평양: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1994), 366쪽.

4) 김일성,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 『김일성저작집』, 42권(평양: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1995), 343쪽.

작동되었는가? 테제의 전략적 가치는 왜 자위, 자립, 자주로 구성되었는가? 경제노선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테제와 가치법칙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이 논문의 목적은 선행 사회주의이론에 기초하여 냉전기의 원형테제와 탈냉전기의 테제변화 그리고 경제노선과 정책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냉전기 북한의 테제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이하 자립경제노선), ‘경제·국방병진노선’(이하 병진노선) 그리고 최초의 가치법칙 적용사례로서 ‘대안의 사업체계(이하 대안체계)’를 분석한다. 탈냉전기에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하 선군경제노선)’과 가치법칙 적용사례로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분석한다.

탈냉전기 북한의 변화를 해석하는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선군정치, 즉 안보적·군사적 분야에 한정하여 분석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경제개혁을 다루는 경우에도 주로 ‘7·1조치’가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테제분석에 근거하여 북한의 경제노선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국제정치의 환경변화가 테제와 경제노선에 미친 영향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그것이 가치법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2. 테제의 이론적 배경과 적용

1) 테제의 이론적 배경

역사의 특정 시기로서 한 시대의 사회는 변화와 발전의 진행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변화와 발전은 인간의 실천활동, 즉 자연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매 시기 사회는 인간의 실천성과 역사성의 산물이다.⁵⁾ 맑스의 유물사관과 실천이론의 핵심적 내용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테제는 총론적으로 마르크스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는 각 나라가 처한 환경의 차이와 소위 사회주의 과도기론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유물사관은 발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를 주체의 자각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으로 규정한다. 즉, 실천이론이다. 실천이론은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기준’이고, ‘불확정적인 이상’을 ‘확정적인 현실’로 전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신념체계이다.⁶⁾ 실천이론은 실천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상대성과 다양성을 허용한다.

실천이론에 따르면, 과거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실사회주의 국가는 나라마다의 경제 및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혹은 경제발전의 격차와 체제의 불안정성에 따라 진행과정이 다르게 나타났다. 실천이론의 논리를 가장 강력하게 이데올로기화한 최초의 사례는 레닌의 정치우선의 원칙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원형체제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르크스는 인류역사를 5단계의 발전과정으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단계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전에 사회주의 단계를 필요로 한다는 과도기론을 제시하였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목적의식적인 시대

5) 손철성, “『독일 이데올로기』 연구: 역사적 유물론의 주요 개념 분석”(서울: 도서출판 영한, 2007), 25~26쪽.

6) 유장현, “맑스·레닌·모택동 철학의 비교와 발전,” 목원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현대사상연구』, 8권(1994), 9쪽.

적 실천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최종목표인 무계급사회 건설을 위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계급을 없애기 위한 도구로서 일시적 과정으로 설정되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현실세계에 적용하여 경제제도로서의 사회주의와 정치혁명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현을 가지적으로 보여 준 최초의 실천가이다. 하지만 레닌의 이론은 마르크스 이론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핵심과제로 부각시킨 점이다.⁷⁾ 또 다른 하나는 ‘정치 우선의 원칙’이다.

최초의 현실사회주의 국가를 이끌었던 레닌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존속기간을 장기간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레닌은 혁명의 성공을 위해 ‘정치 우선의 원칙’을 창안하였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혁명조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우선의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 당조직론을 주창하였다. 레닌의 당조직론은 직업혁명가를 중핵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지도를 위한 당이다. 즉, 대중정당이 아닌 비밀결사 전위당이다. 전위당은 정치사회적으로 후진적이었던 러시아혁명의 산물이다.⁸⁾

‘정치 우선의 원칙’은 조건의 한계를 주체의 사상의식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제였다. 북한은 이를 가장 철저하게 수행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북한의 테제와 주체사상은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사례이다. 테제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적용과 해석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7) 양호민,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論의 재고: 고전적 맑스주의에서 소련의 붕괴까지,”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제29집(2004), 4~5쪽.

8) 양호민, 앞의 글, 24쪽.

2) 소련과 중국의 테제 적용 사례

원칙적으로 사회주의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은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경제적 실현이다. 즉, 경제력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련, 중국, 북한 등은 경제력 수준이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 단계를 자의적으로 규정했다.

소련은 1959년에 공산주의로 진입했다고 선언하였다. 중국은 소련과 다른 전략을 구사하였다. 1962년 생산력 발전 수준의 낙후성을 인정하면서, ‘계획적 상품경제체제’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1986년 생산력 수준이 낙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선언하였다. 이들 3개국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 단계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대표적 사례이다.

<표 1>은 사회주의 이론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왔던 것이 과도기의 설정 문제임을 보여준다. 과도기는 사유재산과 계급 그리고 국가의 소멸시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연관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존속기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요성에 대해, ‘① 착취자의 반항에 대한 진압, ② 경제와 문화의 조직, ③ 피착취대중에 대한 지도’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핵심과제로 구체화시켰다.⁹⁾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마르크스와 일치하였지만, 현실성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각 나라의 과도기 임무수행 과제는 과도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었다. 이 중 경제적 조건의 성숙, 즉

9) 주봉호, “북한의 사회주의 단계론과 사회주의 사회성격론,”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14집(2000), 10쪽.

<표 1> 소련, 중국의 사회주의 과도기 개념 및 단계설정 내용 비교

구분	소련-사회주의 제도수립 중심	중국-계급투쟁-사회혁명 중심
과 도 기	<p>▶ “사회주의 2단계론”(1936, 스탈린) 1단계 사회주의제도 수립 → 과도기 종료, 사회주의 완성</p> <p>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지배, ② 소비에트식 유통체계 수립, ③ 무계급 사회주의 건설완료(1939)</p> <p>2단계 ‘발전된 사회주의’단계(1959, 흐루시초프) → 공산주의 전면적 건설기</p> <p>① 무계급사회주의 건설완료 ② 프롤레타리아독재 종료 ③ 전인민의 국가로 전화</p> <p>소련 1961.10, 전인민의 국가 선언</p>	<p>▶ “대과도론”(1962, 모택동) : 자본주의~공산주의이행 3단계 구분 1기: 사회주의소상품경제와 자본주의경제 병존 2기: 전민소유제, 집단소유제 3기: 공산주의이행기, 단일한 전민소유제</p> <p>▶ “중국적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1978, 덩소핑) ① 상품경제, ② 법에 의한 지배, ③ 학문적 자유, 인간자유에 대한 존중, 비판의 자유 보장</p> <p>▶ “발전되지 않은 사회주의”(1982, 덩소핑) ▶ “사회주의 초급단계론”(1987, 덩소핑) ▶ “3개 대표”이론(2002, 장택민) : 2002.11. 사영기업가 입당 허용 ⇒ 사회주의 초급단계 기간을 100년으로 설정</p>
프롤레타리아독재 폐기 및 부정		

자료: 서유석,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과도기론’에 대한 재인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7호(2007), 281~284쪽; 양호민,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의 재고: 고전적 맑스주의에서 소련의 붕괴까지,”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제29집(2004), 24~25쪽; 첸이신, “1984년 이후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론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KWP)』, 제5권 제2호(1989), 306~308쪽; 이희옥,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사회주의 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12권(1990), 37~38쪽을 참조하여 표로 정리.

생산력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국가의 절충형 정책대안은 ‘시장’과 ‘가치법칙’이었다. 따라서 테제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이론의 체계화 노력은 가치법칙에 집중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테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테제와 가치법칙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김일성 시대의 국가전략은 테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안보에서의 자위를 전략적 가치로, 경제적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3. 냉전기 북한의 공격적 사회주의 발전전략

1) 북한의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의 개념과 구성

(1) 북한 테제의 개념

북한 테제¹⁰⁾는 북한에서 이해되고 있는, 즉 북한 방식으로 마르크스 이론을 집약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발전과 공산주의로의 이행과제를 명시한 전략과제이기도 하다.¹¹⁾ 테제는 첫째, 낡은 사상이 없는 사회, 둘째, 착취계급이 없는 사회, 셋째,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제시되었다.

북한의 ‘테제’는 북한 사회주의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낡은 사상이 없는 사회’는 정치·사상우선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레닌의 원칙을 북한에 적용한 것이다. 즉, 건국 당시 혁명의 조건이 성숙하지 못했던 상황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운영원리로 채택된 ‘국가의 적극적인 지도방조(정치권력의 개입)’와 ‘근로대중의 자원성(실천이론)’¹²⁾은 정치·사상우선 원칙의 적용방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사상잔재의 일소와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의 개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공산주의적 인간형은 실천이론의 가장 적극적인 적용사례이다.

두 번째, ‘착취계급이 없는 사회’는 무계급 사회를 말한다. 무계급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을 의

10) 이 논문에서 이를 가리켜 ‘북한 테제’라 명명한다.

1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98쪽.

12) 위의 책, 17쪽.

미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핵심가치인 평등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한 사회’는 생산력 수준이 ‘필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된 사회를 말한다. 즉,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테제는 사상과 정치 그리고 경제부문의 이상적인 목표를 명제화한 것이다.

(2) 북한 테제의 구성

북한의 테제는 북한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기도 하였다. 그것은 ① 자본주의의 개인주의 사상척결, ② 사회주의 ‘경제관계’ 및 ‘소유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도대 완성, ③ 경제성장 과제로서 ‘생산력 발전’이었다. 북한은 사실상 1950년대에 착취계급이 없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핵심 과제는 정치·사상투쟁과 생산력 발전이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과도기의 진행과정을 요약하면, 과도기의 시작은 1947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및 제도 수립기는 1950년대, 테제의 개념 확장은 1967년, 1967년, ‘사회주의 완전승리’선언은 1986년이다.¹³⁾ <표 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과도기 임무수행을 위한 북한 과도기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도기의 장기 설정이다. 두 번째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장기존속이다. 북한은 과도기를 ‘높은 단계 공산주의’시기까지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계속혁명이다.

13) 서유석,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과도기론’에 대한 재인식,” 286~300쪽.

<표 2> 북한의 사회주의 과도기 개념 및 단계설정 내용

구분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	사회주의 과도기 - 낮은 단계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건설기	사회주의 완전승리기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독재	프롤레타리아독재 - 과도기 사명 수행 권력 → 계속혁명		
경제 영역 · 물질적 요새	- 토지개혁 등 민주주의과제 수행	-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공존	- 무계급사회 실현 - 전인민적소유제 - 노·농간 차이소멸	-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없는 사회 - 수요에 따른 분배
정치 영역 · 사상적 요새	- 식민사관 및 친일파 청산	- 자본주의 잔재 척결 및 복구위협 제거	- 계급적 차이, 노동의 차이, 물질문화생활 수준의 차이 존재	- 전사회 혁명화·노동계급화 - 집단주의 실현
	목표 - 반혁명 기도 격퇴 → 일국적 차원			→ 세계적 차원
	인민민주주의독재	프롤레타리아독재 - 과도기 사명 수행 권력 → 계속혁명 수행		

자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86~117쪽을 참조하여 표로 정리.

첫 번째 ‘과도기의 장기 설정’은 내부적으로 식민지 잔재청산을 위한 부르주아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와 세계적 차원의 혁명 조건을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장기성’ 문제는 두 가지를 존립 근거로 한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착취계급이 사라질 때까지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세계적 차원에서 제국주의가 멸망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근거의 공통점은 장기적 과제라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유산계급 청산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사람, 사상과 문화 등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일국의 사회주의 차원이 아닌 전세계적 차원

의 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필요하게 된다.¹⁴⁾

이것이 일국의 사회주의에서 계급이 소멸하여 과도기 임무를 완수하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단계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한 논리이다. 북한은 사회주의혁명의 충위를 일국의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세계적 차원의 ‘사회주의 중국적 승리’로 구분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제의 장기성과 정당성 논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세 번째 ‘계속혁명’은 사회주의 단계가 계급적 차이, 노동의 차이, 물질문화 생활수준의 차이 등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차이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사상, 기술, 문화혁명, 즉 계속해서 혁명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¹⁵⁾ 이러한 이론체계는 북한 사회주의혁명의 성격을 이중혁명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논거가 된다. 즉, 일국혁명과 국제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의 논리적 위계를 토대로 북한 테제는 구성되었다.

북한 테제의 단계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국주의와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계급들의 경제적 기초를 없애고 사회적 진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적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산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 기반”¹⁶⁾을 다지는 것이었다. 이후 테제는 북한의 총 노선으로 발전한다. ‘안보에서의 자위’,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로 체계화된 국가전략이 그것이다.¹⁷⁾

그렇다면 왜, 자위, 자립, 자주는 테제의 전략적 가치로 구성되었는

14)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21권, 259~275쪽.

15) 주봉호, “북한의 사회주의 단계론과 사회주의 사회성격론,” 10~13, 20쪽.

1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 6쪽.

17) 위의 책, 24쪽.

가? 테제의 내용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1956년 8월 종파사건¹⁸⁾이다. 그것은 이후 북한의 전(全) 역사를 규정짓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8월 종파사건은 내부적으로는 경제노선상의 대립이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당시 당위원장이었다던 김일성을 제거하기 위한 연안파와 소련파의 정치적 쿠데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개입이라는 외교적 문제가 결부된 사건이었다.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 경험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중국과 소련 등의 강대국에 대한 트라우마를 형성시켰다. 트라우마는 정치적 위기의식으로 발전되었고, 사상으로까지 심화되었다. 그것이 신념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주체사상이다. 자주노선을 신념화하게 만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경제성장이다. 즉, 자립경제노선의 성공이

18) 1956년 4월에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발생한 북한 역사상 최대의 권력갈등으로 표면적으로는 경제노선 투쟁이었지만 본질은 연안파와 소련파가 합작하여 김일성파를 공격한 권력투쟁이었다. 당대회 중앙기관 선거에서, 김일성계가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이 발단이었다. 권력에서 소외된 연안파와 소련파는 김일성 소련 방문을 틈타 1956년 6월 1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반(反)김일성운동을 조직화하여 차기 전원회의에서 합법적으로 당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을 해임하고자 했다. 그러나 1956년 8월 30일 전원회의는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김일성이 승리하면서 연안파와 소련파는 숙청되었다. 결과적으로 ‘8월 전원회의’는 김일성에게 정적을 숙청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주는 사건이 되었다. 즉, ‘8월 종파사건’은 김일성의 최대위기였지만 동시에 권력 장악의 결정적 기회였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8월 전원회의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번복하는 치욕을 경험해야 했다. 이 경험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중·소의 개입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주체노선의 절실함을 자각시켰다. 즉, 대외적 측면에서 ‘주체 확립’의 문제를 제기하게 해준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최완규,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서울: 법문사, 2011), 216쪽;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권력체계』(서울: 한울, 2011), 88쪽.

다. 1950년대 북한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이 그것이다.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고도성장”¹⁹⁾은 제1차 5개년계획²⁰⁾의 성과였다.

김일성은 중·소 강대국에 대한 정치적 트라우마에서 ‘사상에서의 주체’와 ‘정치에서의 자주’의 개념을 확고히 세웠다. 그리고 제1차 5개년계획의 조기달성을 통해 ‘경제에서의 자립’노선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즉, 김일성은 이미 1950년대에 주체사상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자주국방에 대한 결정적인 인식은 1956년 ‘스탈린 격하’사건 이후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 전면화된 ‘중·소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로서 자주노선의 4대 구성요소가 갖추어졌다. 1967년 12월 최고인민위원회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가 모든 부문에서 관철해야 할 총 노선으로 채택되었다. 북한에서 자주사상은 김일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현재까지도 그 위상과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8월 종파사건은 모든 분야에서의 자주노선을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수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19) 성채기,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39호 (2004), 117쪽.

20) “제1차 5개년 계획은 1958년 6월에 법령으로 채택되었다. … 제한된 자원과 낮은 기술수준에 처한 북한은 여기서 정치사상의식을 강조하면서 대중적 혁신 운동을 추진했다. … 그 결과 계획은 당초 목표로 제시된 공업의 연평균 성장률 22%를 훨씬 능가하는 성장속도를 기록하면서 당초 계획기간을 2년반 앞당긴 59년 6월에 완수가 선언되었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6), 254쪽.

2)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의 적용

(1) ‘국방에서의 자위’ - 경제·국방 병진노선

병진노선은 1960년대의 국제정세를 반영한 북한의 국가안보전략이다. 1962년 쿠바사태²¹⁾ 직후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되었고,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공식화되었다. 북한의 병진노선은 1950년대의 경제우선정책이 1960년대에 이르러, 안보우선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196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제기한다. 회의에서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선언하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를 채택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이 시기부터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안보국가전략을 추구하였다. ‘국가안보=인간안보’의 등치논리는 전(全) 사회를 안보체제화 하는 고도의 ‘전쟁정치’를 정당화하게 된다.²²⁾ 그 결과 전쟁위협이 상시 존재하며, 위기담론과 안보담론이 주요 통치수단이 된다. 즉, 북한의 공식적인 안보국가담론은, 1962년 병진노선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병진노선은 민간인 동원을 주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이며, 초보적인 수준의 ‘경제적인’ 군비 증강책이었다.

21) 북한과 소련 관계를 결정적 악화시킨 요인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일방적인 양보를 굴복으로 해석했다. 쿠바사태는 소련을 ‘군사적 우산’으로 사고했던 북한의 인식에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다. 김용현, “196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군사화의 대두,” 『북한현대사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서울: 한울, 2004), 431쪽.

22) 황병주, “1970년대 유신체제의 안보국가 담론,”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제27호(2012), 112~115쪽.

1964년 6월 24일 ‘국방과학원’과 1965년 ‘함흥군사대학’을 설립하면서 병진노선의 군사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국방과학원은 무기의 자체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함흥군사대학’은 인민무력부 직속대학이면서, ‘로켓엔진, 미사일, 핵물리학 및 화학’ 등을 교육시키기기 위한 것이었다. 즉, 중장거리 미사일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것은 김일성이 전군의 현대화를 선언하기 이전의 사전조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시기를 병진노선의 본격화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일본이 참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참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본까지 날아가는 로켓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함흥군사대학은 이러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인력을 배양해하는 소명을 지녔다”²³⁾고 강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1966년 ‘전군의 현대화’가 추진되었고, ‘경제-국방병진노선’이 완성되었다. ‘전군의 현대화’는 ① 각종 군수물자의 자체생산 및 기술보유, ② 전시에도 외부지원 없는 군수품 생산, ③ 한·미 연합군과의 전시상황에 대비한 현대화된 전력보유²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김일성은 안보위기를 핵무기 개발로 돌파하고자 했다. 병진노선이 가정하고 있는 대상은 ‘한미연합군’이었다.

‘선군후경’을 표방하고 있는 선군노선이 사실상 196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²⁵⁾는 주장은 병진노선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다.²⁶⁾ 군비

23) 최정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44쪽.

24) 위의 글, 40쪽.

25) 김용순, 『북한의 대미외교행태 분석: 선군리더십의 위기관리』(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8), 48~49쪽. “선군정치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를 비롯

증강정책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북한의 노선 변화의 내부적 요인은 8월 종파사건이다. 김일성의 트라우마는 대외적 안보를 중국과 소련에 의존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심화시켰다. 그로인해 김일성은 자립적 안보체계의 구축을 사활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대외적 자위노선이 독립변수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표 3>에서 나타나고 있는 1960년대 2단계로의 전략변화는 김일성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김일성은 비동맹외교를 통해 중국과 소련에 대한 위기의식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한 두 강대국과 분단체제,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조적 환경은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다. <표 3>은 위기의식이 병진노선으로 나타났다, 병진노선 채택 이후 국방비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체제 전반의 영역에 적용되어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 수호, 경제적 동원, 사회적 통제, 대외 협상력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의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며, “1990년대 후반에 체계화되었지만, 김일성 정권 시부터 ‘군사에서의 자위’를 강조하는 군사중시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1960년대 북한이 보여준 국방력 강화노선은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선군정치와 유사한 모습으로, “북한이 정권수립 이후 지금까지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대응방식”이라는 것이다. “선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선군정치’가 시작된 것은 김정일이 김일성을 수행하여 군부대를 최초로 시찰한 1960년 8월 25일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북한에서의 군사중시사상은 김정일 정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김일성 정권에서부터 북한 사회주의의 이행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속되어왔던 지극히 북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선군정치가 “단순히 오늘날의 엄혹한 정세극복의 처방으로 내려진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선대수령이 마련한 선군혁명령도의 정통성의 계승”이며 “김일성의 군사중시사상에 기초하여 김정일이 체계화한 사상”이라는 것이다.

- 26) 『로동신문』, 2010년 8월 24일. 정론 <김정일 장군>에서도 선군정치의 기원을 1960년 김정일이 서울류경수 105탱크사단 방문일로 설정하고 있다.

<표 3> 냉전기 북한의 경제계획기간별 군비 및 경제 (단위: %)

경제계획		군비예산	연평균 공업총생산증가	연평균 국민소득증가	연평균 예산증가
1단계	전후복구기 1954~1956년	10.3~28.4	42.6	30.1	24.5
	5개년계획 1957~1960년	15.7~19.0	36.6	20.9	19.8
	세부 내용	공업화기초구축, 의식주문제 해결, 농업협동화 완성			
	성과	국민소득: 60%, 공업총생산: 2.8배 증가, 양곡수확: 287만 톤, 소비품생산: 2.1배 증가			
2단계	7개년계획(연장) 1961~1970년	25.4	12.8	8.1	11.8
	세부 내용	중공업우선 발전 및 공업·농업동시발전, 경제·국방병진노선			
	성과	국민소득*** - 공업 총생산: 2.3배, 양곡 수확고*** ※ 계획기간 3년 연장			
3단계	6개년계획 1971~1976 / 1971~1977*	18.8 / (18.3)*	16.3 / (15.0)*	14.2 / (13.8)*	15.9 / (14.8)*
	세부 내용	중공업우선발전, 기술혁명, 국방력 강화			
	성과	국민소득: 1.7배, 공업총생산: 2.5배, 양곡수확고: 800만 톤 ※ 계획기간 1년 연장			
4단계**	2차 7개년계획 1978~1984 / 1978~1986*	14.9 / (14.7)*	12.1 / (10.5)*	8.8 / (7.4)*	10.1 / (9.0)*
	세부 내용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대외무역 증대			
	성과	국민소득,*** 공업총생산: 2.2배, 양곡수확고: 1,000만 톤, 철도 60% 전철화			

자료: 함택영,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문제점,”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경남대학교 출판부, 1993), 180쪽; 이황규,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 『의산국민윤리학회보』, 제5권(1993), 10~12쪽의 <표 4>와 <표 5-1>를 필자가 재구성함.

* 완중기(1977, 1985, 1986)를 경제계획의 미달성분야 완수의 시기로 규정하여 계획기간의 연장으로 본 경우. 괄호() 안의 수치는 추정치.

** 4단계의 1978~1986년 계획은 성과에서 제외함.

*** 미발표.

다음으로, 북한의 노선변화의 대외적 요인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중·소분쟁²⁷⁾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 상수였다면, 중·소분쟁은 변수였다. 그것은 충격적인 변수였다. 두 국가가 북한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상호 간의 동맹국이었다는 점, 사회주의의 종주국과 강국간의 분쟁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의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중·소분쟁은 1956년 2월 25일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의 과도기와 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규정을 둘러싼 중·소의 견해차와 스탈린 격하에 대한 중국의 불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소갈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북한은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소 북방삼각동맹체체의 구축을 모색하였다.

1961년 7월 6일 조소우호조약과 7월 11일 조중우호조약의 체결은 북한 주도로 이루어졌다. 5일 상간의 조·중, 조·소 우호조약 체결은 한·미·일 남방삼각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책이자 ‘자위’적 차원의 외교전략이었다.²⁸⁾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조약체결을 주도하고 성사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중국과 소련에 있어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중·소 등거리 외교를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요소이다.

27) 1956년 10월 헝가리 사태를 계기로 국제 공산주의 진영은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7년부터 중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중국과 소련 간의 갈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간의 국제정세 인식에 대한 불편한 관계와 한국전쟁 지원 과정에서 이미 내연된 것이긴 하나 1956년까지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련의 모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항소노선’이 말해주듯이 양국은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관계가 긴장되고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은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백준기,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변동과 권력재편,” 『북한현대사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서울: 한울, 2004), 255쪽.

28) 최명해,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8집 3호(2008), 128~129쪽.

중·소갈등은 1969년에 이르러서는 무력충돌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소갈등은 미·소화해와 소·독화해, 그리고 데탕트 시대를 여는 기능을 하였다. 세계질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중국의 안보불안을 자극하였다. 미국은 중·소간의 정치적 틈을 활용하여, 미·중화해를 성사시켰다. 중국은 당시 소련을 ‘주적’으로 규정하였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했다.

미·중화해는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약소국인 북한의 안보불안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더불어 1960년대 북한의 안보국가화 전략이 국제정치의 산물임을 입증해준다. 중·소분쟁 이후 북한의 외교정책은 ‘중·소 등거리 외교’와 ‘비동맹외교’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중·소 등거리 외교’는 중·소 양국에 대한 ‘대항 개념의 균형외교’와 ‘연합 개념의 편승외교’를 반복²⁹⁾하는 전략이다. 일명 ‘자주외교’의 일환이다.

국제정치에서 ‘자주’의 의미는 약소국의 생존논리로 사용되는 외교개념이다. ‘자주외교’는 국제정치를 ‘힘이 지배하는 세계’로 이해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자주외교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외교이다. 북한은 우방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을 포함하는 강대국과의 ‘종속’적 외교관계에 대적(對敵)하기 위해 자주노선을 완강하게 고수하였다.

중·소 등거리 외교는 한편에서는 ‘균형외교’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편승외교’이다. 예컨대 만약 북한이 중국과의 외교에서 편승전략을 구사할 경우, 소련과의 외교는 자연스럽게 균형외교전략을 구사하

29)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서울: 한울, 2008), 313쪽.

기 때문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 주목할 점은 의사결정의 행위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이다. 소련과 중국은 그 대상이다. 그것이 등거리 외교의 원리이다. 북한의 등거리 외교는 경쟁하는 두 개의 강대국의 약점을 활용하여, 국익과 생존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국제정치에서 균형외교의 행위자는 강대국이다. 반면 중·소 등거리 외교는 강대국 간의 갈등을 약소국이 역이용한 사례이다. 약소국의 균형외교라는 점에서 특이한 외교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중·소분쟁은 중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연루와 방기를 반복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가 북한의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북한은 지정학적 강점을 외교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하였다. 이는 지정학적 위치가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에서 ‘자위’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안보에 있어서 자위’가 북한의 모든 부문을 규정짓는 대전제가 되는 근거이다.

(2) ‘경제에서의 자립’ - 자립적민족경제건설전략

자립적민족경제전략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자립경제전략은 “대내적으로는 투자자원을 지체적으로 조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수지균형을 이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국민경제를 추구하는 정책”³⁰⁾으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기치하에 중공업우선 발전전략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즉,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

30) 이성봉, “자립적 경제발전전략과 북한적 정치체제의 형성과정,” 경남대학교,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1999), 274~275쪽.

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제”³¹⁾이다.

주체화는 경제자립을 위한 핵심가치로 제시되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화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조화롭게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³²⁾는 것이다. 주체화 실현을 위해 북한은 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고도의 현대화’와 ‘부문구조의 완비’를 추진하였다.

우선, ‘고도의 현대화’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첫째,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장비를 고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생산부문에서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생산물과 농업생산물을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부문구조의 완비’는 첫째,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의 물질적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보장”³³⁾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모든 부문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발전과 자립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즉,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부문구조의 완비는 자립경제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은 첫째, ‘경제에서의 자립’을 위

31) 김백수, “7·1경제관리조치를 통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 부산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연구소, 『국제문제논총』, 제15권(2005), 107쪽.

3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 147쪽.

33) 위의 책, 142~143쪽.

한 필수조건으로 중시하였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자체조달’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방에서의 자위’ 실현을 위한 것이다.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은 사실상 국방사업육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³⁴⁾ 중공업기술은 무기산업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을 자립경제의 기둥에 비유하였다. 중공업 산업은 국방공업과 더불어 경공업과 농업기술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공업을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데 요구되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산수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³⁵⁾할 수 있는 요건으로 여겼다. 실제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생산 분야인 중공업산업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다. 특히 과학화는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급속한 속도를 보장하는 요소로서 중요하였다. 중공업 산업은 스탈린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그로인해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강조하였고 중공업산업을 중시하였다. 즉, 중공업우선 발전전략 역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위한 조건이었다.

1960년 초·중반까지 북한은 식민지 농업국가의 낮은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김일성은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5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7개년계획의 전망과업”을 제

34) 이황규,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 『익산국민윤리학회보』, 제5권(1993), 6쪽.

3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 146쪽.

시하면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끊임 없이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⁶⁾ 자주노선을 이론적 무기로 하여 테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1967년에 이르러서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가 이행기에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김일성이 정의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단계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것을 전제로, 노·농간 계급적 차이가 소멸되고 농민의 노동계급화가 실현된 사회이다.³⁷⁾ 그렇다면 테제는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가? 김일성은 1967년 12월 최고인민위원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강령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테제실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노선을 밝힌 것이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 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입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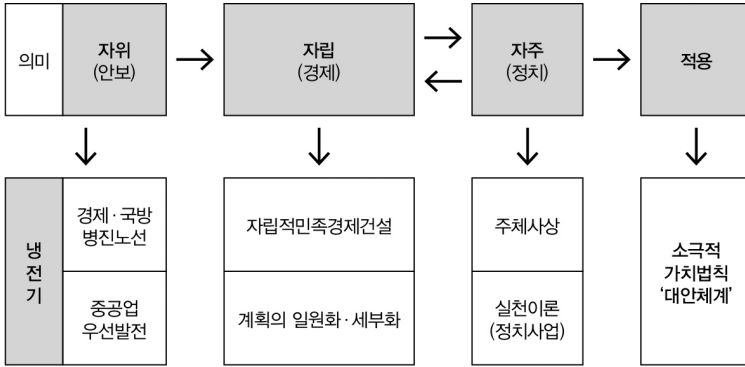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제는 구체적으로 정치에서의 자

36) 위의 책, 22쪽.

3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22권(평양: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1983), 271~272쪽.

3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 24쪽.

<그림 1>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의 의미와 적용



자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20~26쪽을 표로 정리함.

주, 경제에서의 자립, 안보에서의 자위를 전략적 가치로, 경제적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테제는 주체사상의 완성과 더불어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테제가 주체사상에서 밝힌 내용으로 구성된 것에서 확인된다.

자위를 독립변수로 상정한 것은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북한 테제가 “전세계적 범위에서 혁명이 완수되지 못한 조건”³⁹⁾을 대전제로 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존속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테제의 목표가 반제투쟁의 중국적 승리라는 점에서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자위’가 북한에서 가장 선차적인 전략노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66년도에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그 의미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병진노선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군사주의의 제도화로 나타난 대표

39) 위의 책, 94쪽.

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방에서의 자위’이다.

3) 냉전기 소극적 가치법칙의 개념과 적용

(1) 소극적 가치법칙의 개념

‘소극적 가치법칙’은 가치법칙을 ‘계획경제와 국가 소유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내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적극적 가치법칙’은 ‘계획과 소유제도의 부분적 변화를 허용하고, 대외적으로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구분한다. 가치법칙은 테제의 경제적 측면, 즉 생산력 발전에 맞추어 관찰하기 위한 지표이다. 사회주의에서 가치법칙은 ‘사회주의 과도기론’에 근거한다.⁴⁰⁾

과도기로서 사회주의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제도이다.⁴¹⁾ 사회주의 과도기사회는 ‘가치법칙과 상품’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⁴²⁾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40) 김일한,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중국과의 비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2012), 94쪽.

41)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의 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상품생산이 있는것만큼 가치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은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강력한 영향밑에서 진행되는 상품생산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면 없어질 운명을 지니고 있는 상품생산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233쪽.

42) 김일한,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5쪽.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 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의 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상품생산이 있는것만큼 가치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은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강력한 영향 밑에서 진행되는 상품생산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면 없어질 운명을 지니고 있는 상품생산이다.

원론적 의미에서 가치법칙은 ‘상품가치의 크기인 가격을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맞게 결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상품을 교환(거래)’하는 법칙이다. 가치법칙의 본질은 ‘사회적 총노동’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한 사회의 상품의 가격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인 가치는 ‘상품의 교환 관계를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회마다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는 합리적인 경제관리를 위해 가치법칙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합리적 경제관리의 내용은, ① 가격의 계획적 설정, ② 사회적 필요노동량 측정(지출, 원가, 수익성 파악), ③ 개별적 부문, 기업소의 생산력 발전, ④ 생산비지출 감소 및 절약, ⑤ 국민소득의 합리적 분배 및 재분배이다.

가치법칙은 가격을 규제하는 법칙으로서 가격을 통하여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가격을 계획적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가치법칙을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게 된다. 사회주의에서 가격의 계획적설정은 생산에 대한 지도관리에 필수적사업으로 되고있는 사회적로동의 지출 및 그 결과, 원가, 수익성의 계산을 보장하며 개별적 부

문,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발전시키고 생산비지출을 절약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가치법칙과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를 잘 타산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격제정의 근본법칙이다. 이 원칙에 철저히 입각하여 가격을 정함으로써만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필요동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국민소득을 합리적으로 분배 및 재분배하며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가격을 경제적공간으로 리용할수 있다.⁴³⁾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관리법칙을 지키면서 생산력발전과 합리적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보수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⁴⁴⁾ 사회주의경제관리법칙과 가치법칙은 일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만성적인 생산력지체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였다. 가치법칙의 제한은 공산주의 경제관리방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계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2) 대안체계 가치법칙의 개념과 내용

북한이 시도한 최초의 가치법칙은 ‘대안체계’이다. 따라서 그것을 ‘대안체계 가치법칙’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대안체계는 1960년 청산리현지도도를 통해 제시된 청산리 방법을 1961년 12월 김일성이

43)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240~241쪽;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가격을 옳게 정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잘 타산하여 값을 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가격을 정할 때에 상품에 들어있는 사회적필요동량에 정확히 의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격을 사회적필요동량지출에 기초하여 정하지 않는다면 가격호상간의 균형을 유지할수 없고 사회주의적분배를 옳게 할수 없으며 사회적생산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44) 위의 책, 233~234쪽.

남포시 대안전기공장 현지도에 적용한 공업관리체계로 시작되었다.

북한은 대안체계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로 명명하였다. 또한 대안체계에 대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경제조직사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관리체계”⁴⁵⁾라고 정의하였다. 대안체계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로 공식인준 되었다.⁴⁶⁾

대안체계에 대한 북한의 기대는 “생산의 집약적 발전을 다그쳐 주어진 생산자원으로 생산의 량적 및 질적 성장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정확한 계획과 계산, 통계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안체계 가치법칙이 지향하는 목적과 원칙이 생산력 발전과 국가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체계를 가치법칙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을 옹계 리용”⁴⁷⁾할 것을 강조한 점이다. 경제적 공간은 경제적 효과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둘째, 생산·유통의 직접적인 경제영역에서, 물질적 보상제도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점이다. 자율성은 분권화를 의미한다. 셋째, 생산과 유통분야

4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 158~159쪽.

46) 박환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대학』, 제47권 제2호(2012), 278쪽.

4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 160쪽.

의 가치법칙이 ‘가격 개념’, ‘기업채산성 개념’, ‘낭비와 절약 개념’ 등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주의 경제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대안체계는 기업관리의 합리화를 과도적 성격의 특성에 적합한 가치법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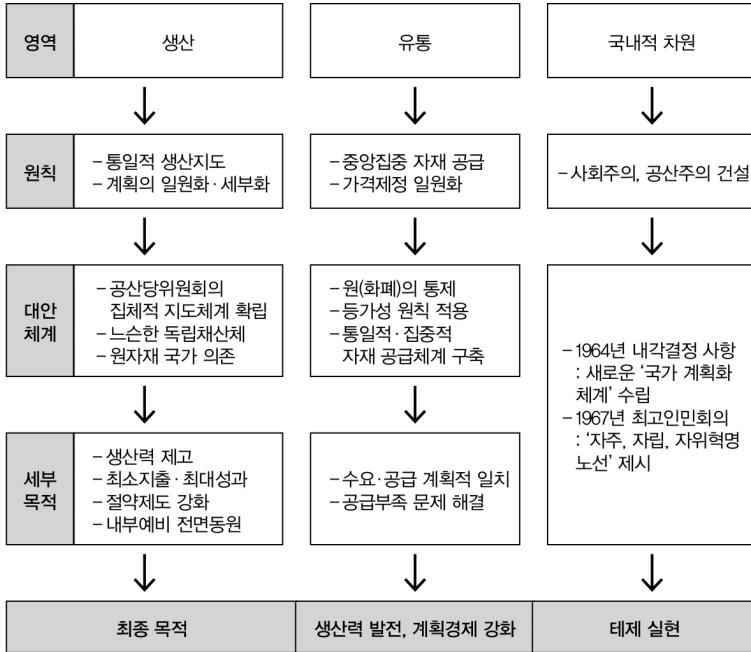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은 ‘계획’의 폐해를 ‘가치법칙’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 위험성을 경계하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하였다. 그 핵심이 바로 당위원회의 집체적관리체계이다. 종전의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폐기한 것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관리 체계란 ①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 확립, ② 계획·생산·기술의 통일적·종합적 생산지도체계 강화, ③ 통일적이고 집중화된 자재 공급체계 구축, ④ ‘후방공급체계’의 개선 등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방법이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체계 가치법칙의 결과 생산비 지출이 감소되고 생산성이 제고되었다.

<그림 2>는 대안체계 가치법칙이 국가경제의 모든 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경제관리, 국가 행정기관의 효율적 관리, 노동생산성 향상 등 생산·유통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가치법칙이 작동될 수 있었다. 대안체계가 전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대안체계는 생산과 유통분야에 한정된 북한 최초의 가치법칙이다. 하지만 가치법칙에서 분배영역을 제외한 것은 대안체계의 목표가 테제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분배부문에서 공산주의적

4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 146~167쪽.

<그림 2> 대안체계-소극적 가치법칙 적용



자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24~25쪽 참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그것은 첫째, 도시와 농촌 간의 생산력 발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노동자-농민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정신노동과 육체 노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고, 네 번째는 공장 기업소간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분배영역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분야로, 사회주의체제의 명분이자 정당성의 보루였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에서 분배영역은 정체성을 가름하는 영역이다. 식량배급, 주택 및 생필품 보급 등이 대표적인 사회주의 재분배의 내용이다.

따라서 가치법칙은 생산과 유통분야에서는 도구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분배영역에서는 목적 그 자체, 즉 보존되었다.

한편 북한의 대안체계 가치법칙은 정치·경제적인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이다. 북한은 일원화 원칙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고, 세부화에서는 “계획지표에 의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경제활동을 세부분야에 이르기까지 다 맞물려 도의적으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법적과제로 규정”하였다. 일원화와 세부화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김없이 수행”⁴⁹⁾할 것을 강조한 의무사항이다. 북한은 이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전략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여겼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매우 강한 유기체적 특성을 띠게 되었다. 즉, 국가경제 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기제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균중노선 원칙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균중노선은 우선,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며 웃사람이 아래 사람을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이다. 또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이다.⁵⁰⁾ 즉 사회주의의 기본원리인 집단주의를 모든 기업소와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관철시킨 것이 대안체계의 특징이다.

대안체계의 수행방식은 무엇보다 생산과 관리를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즉, 모든 생산과 관리분야를 “서로 뗄수 없이 밀접히 련관”시켜,

49)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7 사회주의경제건설 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237~238쪽.

50)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 139~413쪽.

“어느 한 측면이 잘못되여도 전반적관리운영사업이 원만히 진행될수 없”⁵¹⁾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상호의존성과 통일성을 높여 유기체적 관계를 형성시킨다. 즉, 개인의 사상의식 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기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보신주의, 온정주의, 형식주의 등 관료적 사업방식을 관행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대안체계 가치법칙의 한계는 실천이론에 따른 것이다. 즉, 자주노선의 결과이다. 자주노선은 대외적으로는 폐쇄성을 감수하는 모험전략이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상호의존적 유기체적 구조를 형성한다. 유기체적 구조의 위험성은 한 곳에서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유기체적 속성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을 구조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냉전기 대안체계 가치법칙은 한마디로 체제의 완성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산력 발전이 주된 목적이었다. 반면 탈냉전기 북한의 가치법칙은 내부를 향한 개혁과 외부로 향한 개방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즉,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질적 변화는 사회주의 붕괴가 야기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체제유지와 국가존립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탈냉전기 가치법칙은 수세적인 방어전략으로 전개되었다.

51) 위의 책, 162쪽.

4. 탈냉전기 북한의 수세적 사회주의 방어전략

1)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의 변용

(1) '국방에서의 자위' - 선군외교노선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북한의 안보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중·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반면 조·소조약은 폐기되었다. 사실상 북·중·소 북방 3각 동맹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북한은 초강대국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동북아 안보질서 속에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심각한 안보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탈냉전기의 테제는 선군사상으로 재편되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위부문에서의 선군외교, 자립부문에서의 선군경제, 자주부문에서의 선군사상으로의 변화였다. 탈냉전기 북한의 가장 선차적인 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대외적 안보위협을 해소이다.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것으로, 체제 및 정권유지를 위한 경제난 해소였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동시 해결방안으로, 북한은 선군외교⁵²⁾전략과 선군경제노선을 병행하였다. 그것은 선군사상의 사상이론적 뒷받침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선군외교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비확산' 전략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압도적 국력을 가진 패권국가이다.

52)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분야의 하나는 정치외교전이다. 강력한 군력은 대외관계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담보하지만 쇠약한 군력은 사대굴종과 민족의 치욕을 가져온다. ... 선군에 기초한 자주정치로 ... 선군외교전법으로 강경하게 나오는 적들을 초강경으로 제압하시고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능란하고 주동적인 외교활동을 벌이시면서...,” 『로동신문』, 2002년 4월 22일.

선군외교는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개발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모험주의 전략으로, 강대국을 향한 약소국의 균형외교이다. 국제정치에서 국력차이가 큰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균형외교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균형외교전략을 ‘모험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 강대국의 군사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소국이 국익의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강대국에 대한 편승외교전략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대부분의 약소국은 패배할 것이 분명한 강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한 모험주의 외교를 5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그 배경에는 일반적인 약소국과 다른 인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은 모험주의가 국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소등거리 외교로부터 선군외교에 이르기까지 북한외교가 일관되게 모험주의 전략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 주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 이점에 대한 북한의 합리적 계산이 고려되어 있다.

선군외교는 북한의 모험주의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특히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방지를 세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북한을 악의축이자 불량국가로 공식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모험주의의 전형이다. 미국에도 굴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선군외교는 “주변국가들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체제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정책”⁵³⁾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군사력을 더 이상 불확실한 외부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확실한 자위노선이자 안전보장책이다. 북핵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중국이 배제되어왔다는 사실은 그것을 입증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은 북한이 ‘이기주의적 국가’⁵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거래공간’⁵⁵⁾을 창출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첫째, 핵은 안보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력적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 미·중등거리 외교의 조건이 형성된다. 북한이 핵협상을 미국으로 국한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전개할 경우, 중국은 북핵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실존적 억지’는 공포의 균형을 야기한다. ‘실존적 억지’는 핵능력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공포감을 활용한 심리전이다. 단 1개의 핵무기만으로, 혹은 핵무기의 실전배치와 무관하게 핵무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만으로도 핵공격을 자제시킬 수 있다. 즉, 핵은 군사적 독립성과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북한은 단 한 개의 핵무기만 보유해도,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진 미국에게 협상력을 갖게 된다. 핵무기의 숫자는 사실상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그 자체보다 제3세계로의 확산을 더 우려하고 있다. 그 점 역시 협상력을 제고시킨다. 북한이 제3세계 비동맹외교에 주력해왔다는 점 또한

53) 이수석, “김정은 시대 선군외교와 핵-경제 병진전략,” 『월간북한』, 10월호(2004), 26쪽.

54)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198쪽. 국제정치에서 이기적인 국가는 “모든 국가가 합리적인 동시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55) 김태현,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2차 북핵위기시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신아시아』, 18권 1호(2011), 193쪽.

그렇다.

핵을 보유한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즉, ‘핵을 보유한 북한’을 미국은 선제공격 할 수 없다. 핵전쟁은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핵은 전면전을 차단한다. 왈츠는 냉전체제를 ‘핵에 의한 평화의 시대’였다고 역설했다. 핵무기로 유지되었던 냉전체제가 전쟁이 아닌 평화로 종결되었던 것은 역설적이지만 핵억지의 결과이다. 공포의 균형이 작동된 것이다. 이에 대한 북한식 적용이 핵개발 논리이다.

북한의 핵억지 전략은 ‘불안하지만 장기적인 평화’가 보장된다는 안보국가화 논리의 경험적 교훈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모험적인 외교전략은 역설적이지만 미·소 냉전기가 평화로 종결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이 근거가 되었다. ‘핵을 통한 평화추구’라는 점에서 선군정치는 안보딜레마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핵무기의 역설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을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강성대국론에서 군사적 강성대국의 의미는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미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국가존립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추진된 것이다.

셋째, 핵무기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무기체계이다.⁵⁶⁾ 핵개발 전략은 “한 국가가 3년 이상 국민 총생산액의 10%를 초과하여 국방비를 사용”하고 국방비 상승률이 매년 “10%를 넘어가면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채택된다고 한다.⁵⁷⁾ <표 3>에서 확인하였듯이 북한은 1954~1956년 200% 증

56) 김재관, “제2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한 여부: 경제/군사안보 영역의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제52권(2007), 310쪽.

57) 신재인,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망과 한반도에서의 기술-경제협력,” 세종연구소, 『세종연구』, 제98-07호(1998), 29쪽.

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증가시켜왔다.⁵⁸⁾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선 군비감축분의 비용을 경제발전에 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목할 점은 1987년 이후 개발도상국이 수입한 미사일의 42.5%가 북한산이라는 점이다.⁵⁹⁾ 즉, 북한의 핵은 경제적 측면에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핵은 북한의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지탱시켜줌으로써, 병진노선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에서 핵무기는 군사·안보적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무기로서 기능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체제보장책이 존재할 때만 거래될 수 있다. 핵무기가 1990년대 북한위기의 총체적 해결수단으로 채택된 이유이다.

(2) '경제에서의 자립' - 선군경제건설노선

북한의 핵무기 전략은 선군외교전략이면서 동시에 선군경제노선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포괄하는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국제환경에서 국가존립이 위태로워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안보국가화 전략일 뿐 아니라, 내부의 체제안정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총체적 해결책이었다.

핵무기를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군경제노선은 군사경제 우선노선이다. 그것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58) 이성환, “북한 군사노선 변화의 합리성 고찰과 변화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2007), 247쪽.

59) 최정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연구,” 131쪽.

에서 김일성이 전후 경제건설노선과 인민경제복구건설노선으로 제시한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⁶⁰⁾노선과 1966년 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자원배분의 한계로 인해 중공업 부분의 발전을 일시 유보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육성, 하부구조 육성, 시장화 및 대외개방을 추진한 것 또한 사실이다.

1999년 이후 산업부문별 점유율이 이를 증명해준다. 1998년 대비 1999년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가 11.6%, 경공업이 2.6%, 전기 가스 수도업은 16%, 건설업은 35.7% 등 민수경제 분야가 크게 성장하였다. 반면 중화학공업은 1994년 -5.2%, 1995년 -5.6%, 1996년 -9.8%, 1997년 -18.8%, 1998년 -4.6%로 급격히 감소⁶¹⁾하였다.

<표 4>가 보여주듯이, 2002년 선군경제노선 선포 이후,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선군경제노선은 경제의 하부구조를 강화하여 민수경제와 연관시킨 점에서 중공업우선발전노선과 차이가 있다.⁶²⁾ 북한이 강조하는 경제의 하부구조는 경제전반의 시설을 의미한다.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 “사회적재생산의 모든 단계들 사이, 지역간 경제적연계를 지어주는 역할”과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 기능을 한다.⁶³⁾ 그것은 구체적

60)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 14쪽.

61)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서울: 선인, 2004), 131쪽.

62) 김성주,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통일연구』, 제16권 제2호(2012), 138~140쪽.

63) 리학문, “경제의 하부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 요구,” 39쪽.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관철에서 경제하부구조의 발전은 우선 나라의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라의 군력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한다. ... 경제의 하부구조의 발전은 또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표 4> 북한의 예산지출계획에서의 부문별 증가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업	21.3	-	29.1	12.2	8.5	5.5	6.9	9.4	9.0	9.4
경공업	12.4	-	-	-	16.8	-	5.6	10.1	12.9	9.4
선행 부문	전력: 12.8 석탄: 30.0	-	-	9.6	11.9	49.8	8.7	7.3	13.5	12.1
과학 기술	15.7	60.0	14.7	3.1	60.3	6.1	8.0	8.5	10.1	10.9

자료: 김성주,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통일 연구』, 제16권 제2호(2012), 145쪽 재인용(연도 축약표시는 필자).

으로 지방공업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방공업에서 경공업생산 비중은 1994년 9월 현재 53%로 그 비중이 컸다. 하부구조 강화 정책은 결국 경공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이는 선군경제노선이 1990년대의 총체적 위기를 촉발했던 경제난에 대한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경공업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경제강국은 국가 차원의 경제력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정치적 안정과 직결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가치법칙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내부뿐 아니라 대외적 외교관계 확대 및 경제특구 활성화⁶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경제강국을 의미하는 강성대국론은 테제 실현을 위한 단계적 목표로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64) 김연철, “김정일 지도체제의 ‘신노선’과 경제개혁 김정일은 ‘호랑이 등’에 탈 것인가,” 사회평론, 『월간 사회평론·길』(1995), 96쪽.

65) 고유환,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통일 논총』(2003), 145쪽.

2010년 9월 28일 조선노동당 3차 당대표자회 결정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교체하였다.⁶⁶⁾ 이것이 테제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테제의 지속인가, 폐기인가?

강성대국은 핵무기를 통해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표방한 강성대국의 구성요소는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다.⁶⁷⁾ 구성내용이 테제의 요소와 일치한다, 이는 강성대국론이 테제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은 사상·정치강국은 김일성 시대에, 군사강국은 김정일 시대에 핵을 보유함으로써 실현되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강성대국론은 남은 과제인 경제강국 실현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⁶⁸⁾ 즉, 강성대국론은 테제가 추구했던 생산력 발전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강성대국은 핵무기를 통해 경제강국을 달성하겠다는 안보국가전략의 일환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자위, 자립, 자주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안전망이 핵이다. 북한은 핵을 안보 차원의 국가존립, 경제난 해결,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적인 전략무기로 본 것이다. 따라서 강성대국은 테제의 탈냉전 버전으로, 국가주도의 경제개혁을 포괄하고 있다.

선군경제노선이 표방하는 “‘국방공업의 우선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민간경제 부문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제발전”⁶⁹⁾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전략으로, 국방공업

66) 이정철,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 평가: 선군 이데올로기의 제도화,”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31호(2010), 5쪽.

67) 철학연구소,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22~26쪽.

68)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238쪽.

우선노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국방공업의 토대 위에서 경제분야를 이전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방공업을 위해 복무하는 중공업”이었던 것이 “경공업과 농업을 위해 복무하는 중공업”으로 변화된 것이다.⁷⁰⁾

선군경제노선이 발표된 2002년 9월 5일은 1998년 헌법개정일과 일치한다. 날짜를 중요시 여기는 북한의 관행으로 볼 때, 주목할 지점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통치자로서 김정일의 위상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9월 5일에 맞추어 ‘선군경제노선’을 발표한 것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93년부터 국방위원장직을 수행해왔던 김정일은 선군정치의 제도화와 동시에 경제난 해결을 통해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자신을 부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강성대국건설에 대한 비전제시로 나타났다. 강성대국론은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강성대국’ 제하의 정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강성대국론은 고난의 행군을 감내한 인민들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⁷¹⁾ 즉 총체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김정일의 국가 지도체계 정비 및 경제재건의 방식은

69) “지금까지 조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으로 틀어쥐고 왔다. … 선군시대의 경제전략은 국방공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토대할뿐아니라 그 자체가 중공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조선신보』, 2003년 4월 11일; 김성주,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과정 연구,” 121~124쪽 재인용.

70) 위의 글, 138~140쪽.

71) 김용현, “1960년대 북한의 위기와 군사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현대북한연구』, 제5권 제1호(2002), 126쪽.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건설’이었으며, 그것은 테제의 생산력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이 공동사실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 1999년이라는 사실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강성대국건설이 정치적 차원의 선군 정치의 실현과 동일한 전략선상에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이 그해에 강성대국을 선포하고 그 축포용으로 ‘광명성1호’를 발사한 것은 강성대국론이 단순한 경제전략이 아닌, 정치와 군사적 목표가 결합된 포괄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즉, 강성대국론은 그 구성요소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테제의 구성요소와 일치하며, 정치-외교-경제-군사전략을 포괄하는 총 노선이다.

2) 탈냉전기 적극적 가치법칙으로의 전환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특징

‘적극적 가치법칙’은 냉전기의 ‘소극적 가치법칙’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계획과 소유제도의 부분적 변화를 허용하고, 대외적으로 범위가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7·1조치는 탈냉전기 적극적 가치법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7·1조치는 ‘가격 및 생활비 인상조치’로, 선군경제노선을 총 노선으로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즉, 강성대국실현을 위한 조치로 해석 할 수 있다. 2002년 선군경제노선을 발표한 담화문,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의 제목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탈냉전기 가치법칙의 목표는 경제강국을 의미하는 강성대국 실현에 있었다.

탈냉전기 가치법칙의 특징은 대외적 개방정책에도 폭넓게 적용되

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냉전기와 비교해볼 때,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북한의 가치법칙은 내부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존립과 생존을 위한 것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가치법칙의 적용범위를 대외적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테제는 과거의 공세적 성격을 잃고, 수세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가치법칙의 운용은 적극적으로 전환되었다. 그 전환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적 차원의 가치법칙은 내부 개혁조치로서, 2002년 7·1조치에 집약되었다. 이 조치는 시장과 개인소유의 공식적 허용, 국가계획의 축소, 기업의 자율성 확대 등 인민경제 활성화를 중심에 둔 개혁조치였다. 대외적 차원의 가치법칙은 외부조치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개성공업지구법 채택 등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의 대외관계의 변화이다. 2000년 이탈리아, 영국, 호주, 필리핀과의 외교관계 개선, 2001년 유럽연합국가(EU)와의 외교관계 수립 등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폭넓게 전개되었다.⁷²⁾

가치법칙이 대외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된 것은 세계질서에 편입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⁷³⁾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김정일의 총체적 대응이 선군노선이라면, 선군경제노선은 개혁과 개방을

72) 김백수, “7·1경제관리조치를 통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 120쪽.

73) 오승일, “현시기 대외무역에서 가치법칙의 옳은 리용은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중요담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연구』, 제2호(루계 제143호, 2010), 37쪽. “가치법칙은 결코 개별적나라의 범위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따라서 나라들사이에 국제적범위에서도 작용하게 된다. … 이것은 자본주의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게 된 오늘의 변화된 대외적환경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작용하는 가치법칙의 특성을 옳게 밝히고 그것을 리용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한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일련의 조치들이 선군경제노선이라는 총노선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1998년 9월 5일 헌법개정 → 2001년 10월 3일 담화 → 2002년 7·1 조치 → 2002년 9월 5일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 선포 → 2002년 9월 12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 2002년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 채택 등은 선군경제노선의 맥락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7·1조치의 직접적인 목표가 생산성 향상이었다면, 선군경제노선의 당면목표는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총체적인 경제전략 차원에서 내·외부를 향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단행하였다.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탈냉전기 일련의 과정은 북한의 가치법칙이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998년 9월 5일 채택된 개정헌법에서, 정치적으로는 주식제 폐지, 국방위원회 강화, 경제적으로는 ‘독립채산제 실시, 원가·가격·수익성 개념’을 도입하였던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개인 소유제의 인정 및 확대와 더불어 경제관리에 있어서 수익성 개념도 같은 의미에서 강조되었다. 헌법개정⁷⁴⁾ 또한 ‘선군경제노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다.

74) 개정헌법의 경제조항은 ①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를 국가에서 사회협동단체, 개인으로 확대, ② 경제관리운동에서 원가, 가격, 수익성 개념 도입 및 자율성 확대, ③ 개인개념을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바꾸고, 텃밭 경작 등의 생산물 소유와 상속권 인정, ④ 지적 재산권법(저작권, 발명권) 제정, ⑤ 특수경제지대 설정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 조문 설치, ⑥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⑦ 농업의 현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전략의 개념과 내용

선군경제노선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경제회생전략이면서 동시에 국가주도의 시장화전략이다. 이를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전략’⁷⁵⁾으로 정의한다.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전략’은 북한당국의 ① 전통적인 경제관리 방식으로서 ‘경제조직자로서의 국가 기능’을 ‘시장’에 확대 적용한 ‘분권적 계획시장경제’ 모델이자, ② 프롤레타리아 독재당에 의한 경제의 관료적 조정체계에 시장조정체계를 결합한 운영체제로, 자유시장이 아닌 국가가 계획하는 계획시장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변화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테제의 변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군경제노선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7·1조치의 목표에서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7·1조치는 우선, 계획경제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따라서 7·1조치는 시장사회주의를 통한 실리추구를 공식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⁷⁶⁾

두 번째는 국가유통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⁷⁷⁾ 국가의 공급능력이 상실되면서 국가유통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시장은 유통체계 복구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즉, 시장만이 유일한 기회요소였다. 7·1조치는 계획부문의 축소, 생산·유통·분배의 자율성 허용, 생활비 차등지급, 성과급제 도입, 노동과 소비품의 가격 현실화 등 파격적

75)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전략’은 필자가 편의상 명명한 것이다.

76) 이현경,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제26권 3호(2011), 43쪽.

77) 안희창, “북한의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의 상관관계 분석,”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7권 제2호(2011), 176~186쪽.

인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이었다.

세 번째는 생산성 향상이었다. 이를 위해 정신적 자극보다 물질적 자극을 더 강조하였다. 차등적 노동-보수체계의 도입이 기업소와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 판단의 결과였다. 가격체계변화 또한 분배기준을 ‘실리’로 전환한 것이다. 분배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상의식을 중시하던 관점에서 벗어났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은 물질적 이윤을 동기화하여 ‘경제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도모한 사례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온정주의보다 자본주의적 실리주의가 국가 기업소 운영의 주된 원리로 적용되었다. 이 또한 군중노선에 의한 관리가 아닌 자본주의의 물질적 자극을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북한 테제가 전통적인 공산주의적 관리방식에서 점차 벗어나는 격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62년 마오쩌둥 시기 ‘대과도론’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소상품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공존, 즉 ‘계획과 시장의 공존모델’로서의 시장사회주의를 선언하였다.⁷⁸⁾ 1978년에 이미 덩소평은 미중화해의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개혁개방노선을 추구한 것이다.

78) 김연철·박순성, “북한경제관리개혁의 성격과 전망,” 『북한 경제개혁연구』(서울: 후마니타스, 2002), 19쪽; “1950년대 유고의 실험으로부터 시작된 시장사회주의의 역사는 체코(1966~69)와 헝가리(1968~79)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중국(1978~) 베트남(1979~)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김일한,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중국과의 비교-,” 96~97쪽.

미중화해는 사실상 안보위협을 해소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미국의 대(對)소련 전략, 즉 대(對)공산주의 전략하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협조아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개방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환경과 대조를 이룬다. 만약 ‘북미수교’라는 대외변수의 변화가 생긴다면 북한의 개혁개방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 중·미관계의 변화는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은 사실상 중·미전쟁이었다. 반면 중·소는 사회주의 동맹국이었다.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에서 과거의 동맹관계나 이념보다 현재의 국익을 우선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한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1978년 ‘중국적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1982년 ‘발전되지 않은 사회주의’, 1987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등 가치법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채택 이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와 시장제도의 양립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그리고 ‘계획과 시장의 공존모델’로서의 시장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간을 100년으로 설정하였다.⁷⁹⁾ 그 핵심에는 국가주도의 시장사회주의로의 변화를 지속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이 있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본주의로의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민주정치 발전에 대해서 소극적인 점⁸⁰⁾도 이러한 맥락이

79) 양호민,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論의 재고: 고전적 맑스주의에서 소련의 붕괴까지,” 24~25쪽; 첸이신, “1984년 이후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론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KWP)』, 제5권 제2호(1989), 306~307쪽.

80) 첸이신, 위의 글, 307~309, 317쪽.

다. 즉, 정치체제의 변화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체제전환으로 해석될 만큼 전면적인 수준의 가치법칙을 적용하면서도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제환경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미중화해라는 우호적인 환경에 의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북미화해가 성사된다면 북한 또한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역시 중국처럼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의 변화는 대외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외변수를 제외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평가하기 어렵지만 향후 북한은 매우 점진적으로, 중국 모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토대 위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접목한 모델이라는 점, 둘째, 시장화의 성격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본주의의 자유시장이 아닌 국가가 통제하는 계획시장이라는 점, 셋째, 북한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출발을 1978년이라고 전제하고, 40여 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을 북한에 적용해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의 시작을 7·1조치가 시행된 2002년이라고 전제하면 2040년경이 된다. 앞으로 25년 후 북한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중국처럼 파격적인 개혁개방은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만큼의 성장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의미 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은 붕괴 가능성보다 현재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을 토끼에 비유한다면, 북한은 거북이에 비유될 수 있다. 북한이 중국모델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북한의 경제전략을 ‘국가주도 계획시

장'으로 정의하였다.

북한 내부에도 그러한 흐름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논거는 시장의 제도화와 국가주도성 때문이다. 우선, 시장의 제도화는 2003년 '종합시장'의 합법화, 2009년 말 화폐개혁, 2010년 시장 억제 조치 철회, 2013년 비공식경제 용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계획경제체제의 복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7·1조치와 선군경제노선이 개혁 그 자체보다 국가체제 정상화에 중심을 둔 정책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지만 북한의 제도화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북한이 주민 가계소득 중 비공식 소득비중이 3분의 2 이상 혹은 3분의 4 이상, GDP 대비 40% 이상 혹은 50% 이상⁸¹⁾이라는 의미 있는 양적화 대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의 시장화를 위한 제도화가 체제수호라는 전제하에 국가의 계획에 의해 추진 되는 한계 때문이다.

즉, 국가주도성 때문이다. 북한의 비공식경제 비중은 옛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다.⁸²⁾ 비공식경제영역이 주민들에 의한 자생적 생존전략 차원에서만 진행될 경우,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는 옛 사회주의국가, 체제전환국가, 개발도상국가의 경험적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7·1조치는 국가의 생산과 공급능력의 한계를 시장이 해결할 것이라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이 시장을 위협보다 기회요소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81) 이석기 외, 『북한경제재점분석』(KIET산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3-673), 70~71쪽.

82) 위의 책, 68~69쪽.

정상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소유권 행사와 계약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에 있어서 시장경제는 중국의 경우처럼 국가에 의해 계획되거나 동구의 국가들처럼 체제가 붕괴되어 시장세력이 지배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 또한 1998년 이후 북한의 비공식영역의 확대가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가의 통제와 계획은 개혁·개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으로 고수되었다. 이렇듯 7·1조치는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이 아닌 체제수호를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7·1조치는 테제의 후퇴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통치 정당성과 지배수단으로서의 배급제 및 사회보장제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등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의 정치·도덕적 명분과 인민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의 축소를 의미한다. 냉전기의 대안체계 가치법칙이 생산과 유통에 국한되어 적용되었던 것과의 차이점이다.

3) 테제의 지속과 변화

(1) 정치적 측면의 지속과 변화

1973년 정치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징표는 “첫째로 적대계급의 준동이 없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게 되는 사회이다. ... 둘째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즉 무계급사회이다. ... 셋째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축성되고 지난날의 중산계층까지도 사회주의제도를 진심으로 지지하게 되는 사회이다. ...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키는 것이다. ...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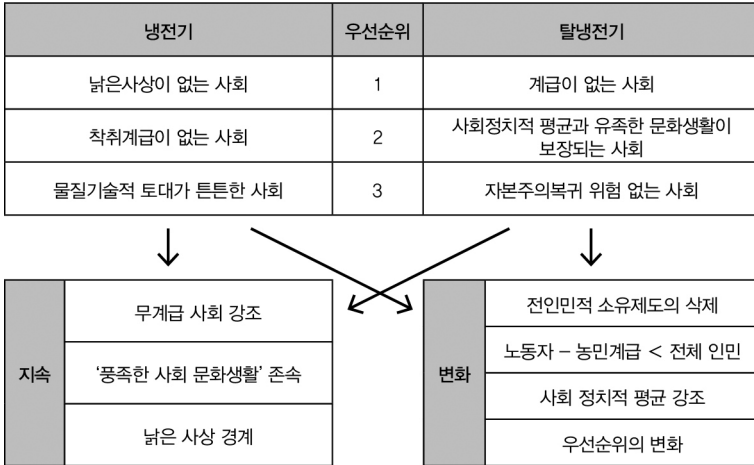
반면 2007년 조선말대사전에서 정의된 개념은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어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균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균과 유족한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의 물질문화가 튼튼히 마련되어 국내적으로 자본주의복귀의 위험이 없어진 사회”이다.

두 가지의 정의를 기준으로, 테제의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속의 측면은 ① 무계급 사회 강조, ② ‘풍족한 사회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 존속, ③ 낡은 사상경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순위였던 ‘낡은 사상이 없는 사회’가 3순위로 격하되었다. <그림 3>은 이를 비교하여 요약한 것이다.

‘무계급 사회’가 1순위로 격상되었다. 이유는 ‘정치사상’을 강조하는 것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시장화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순위변화는 본질적 변화가 아닌 현상변화이다. ‘전략적 유연성’ 범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치사상 중심의 집단주의체제’에서 ‘경제 중심의 개인주의’로 변화된 현실을 수용한 실사구시 전략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음으로 변화의 측면은 ① ‘전인민적 소유제도의 삭제’, ② ‘노동자-농민계급’ 대신 ‘전체 인민’ 강조, ③ ‘물질기술적토대’에서 ‘토대’ 삭제, ④ ‘사회 정치적 평등’ 강조, ⑤ 유족한 문화생활 강조, ⑥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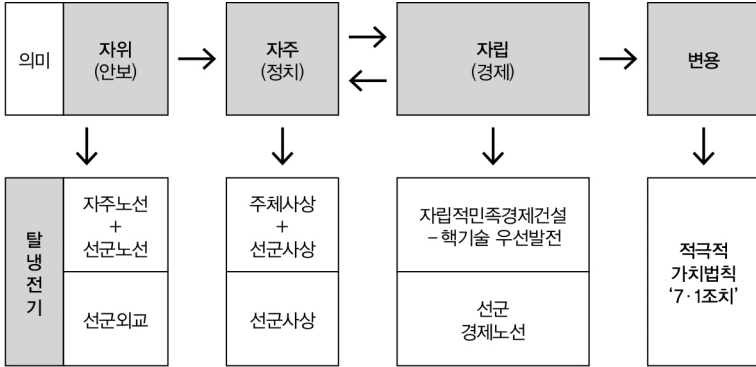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주의 완전승리’개념의 지속과 변화



의 변화’ 등이다. ①~③은 경제적 측면으로, 생산관계의 변화와 계획 경제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협동적 소유제의 전인민적 소유제로의 전환’을 추구했던 소유제도가 삭제된 것은 체제의 핵심적 내용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④~⑤는 정치사상적 측면으로 특히 ‘사회 정치적 평등’이라는 표현은 1992년 처음 등장한 것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물질기술적 토대가 취약해진 상황을 반영하여 정치적 평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은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조건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킬 만큼 급격하지 않은 변화’, 즉 ‘점진적 변화’였고, 둘째는 “①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 또는 공산당 지배에 의한 권력구조, ② 국가소유체계, ③ 관료적 조정 메커니즘” 중 한 가지 이상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였다.⁸³⁾ 코르

<그림 4>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의 변용



나이의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 테제의 개념변화를 분석하면, 체제전환이 아닌 ‘개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첫 번째 조건은 ‘현존하는 북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② ‘국가소유체계’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한 사적소유의 허용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식담론에서 ‘전인민적 소유제도’를 삭제하였고, ‘노동자-농민계급 대신 전체 인민’을 강조한 점에서 ‘점진적 변화’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즉, ‘체제변화’가 아닌 전통적 계획경제를 개선하는 수준의 양적변화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 자본주의복귀의 위험이 없어진 사회”라는 표현은 ‘사회주의 체제수호’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시장화 물결을 위협요소로 인식한 수세적 언어라는 점에서 체제개혁이라는 분석에 설

83) 김연철, “북한의 탈냉전 발전전략,” 창작과비평사, 『창작과비평』, 제30권 제2호 (2002), 43쪽 재인용;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361, 388.

득력을 제고해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당국이 전통적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체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제는 탈냉전기를 맞아 ‘선군경제노선’으로 변용되었을 뿐, 김정일 시대의 공식담론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치법칙이 냉전기에는 공산주의를 향한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목표실현에 충실하였다면, 탈냉전기에는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선군경제노선은 테제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모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두 가지의 핵심원칙인 소유제도와 계획부문에서 ‘전략적, 점진적 변화’를 겪었다.

북한은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후퇴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시장화의 부작용을 감수하였다. 시장경제의 폭발력이 북한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목표가 체제전환보다 ‘개혁’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냉전기의 테제가 ‘가치실현’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탈냉전기는 공식담론, 즉 명분은 유지하고 실제적인 정책에서는 실사구시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이 개념화한 원형테제를 기준으로 두시대의 변화를 요약하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와 강조점, 그리고 적용 범위가 변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 고수노선은 포기되지 않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전통적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체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중간 단계인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모델로의 전환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속성장 공격적이었던 것이 수세적으로 변화되었다.

(2) 경제적 측면의 지속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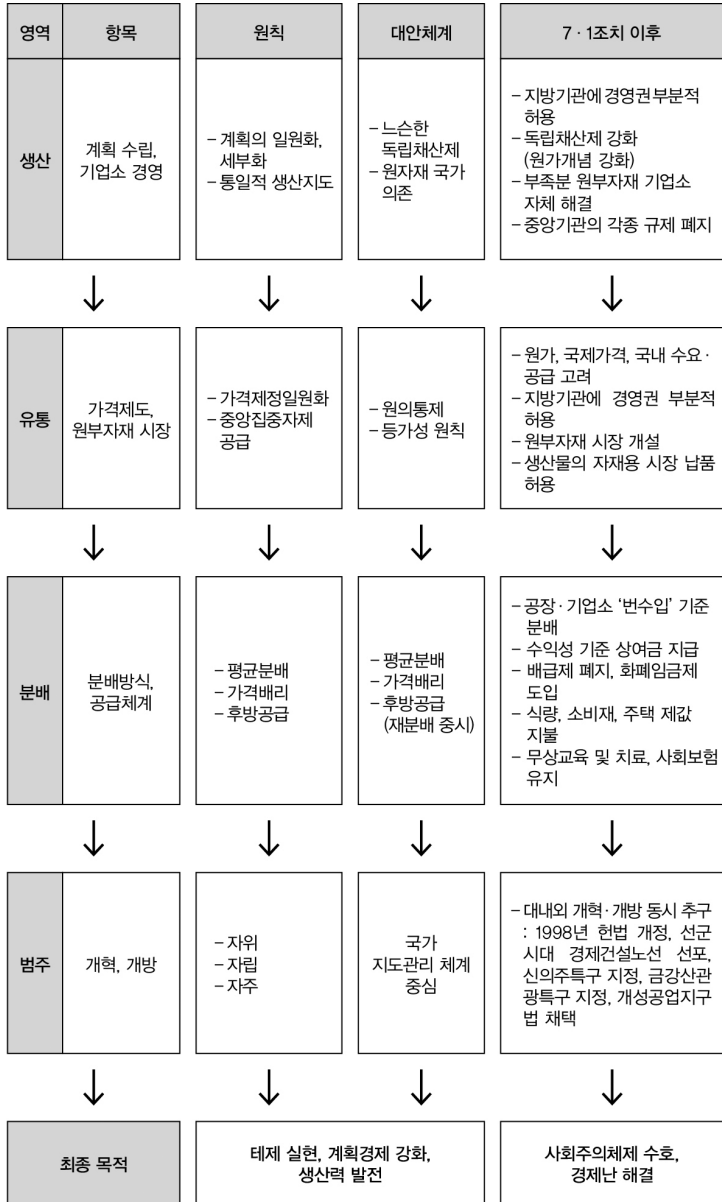
대안체계는 집단지도체계, 통일적 생산지도체계, 중앙집중적 자재 공급체계, 후방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① 수요와 공급의 계획적 조정, ② 대중소비품의 평균 분배, ③ 생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통, ④ 생산력의 계획적 발전 등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실현과 생산력 증가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가치법칙은 점차 지방예산제, 지방분권화와 자율화 등 사회주의 경제관리 합리화 대책뿐 아니라 정치 사상 투쟁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까지 그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김일성은 1978년 10년 연속 경제의 성장동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정은행 부문에서 가치법칙의 적용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발전법칙에 맞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⁸⁴⁾ 그것은 가치법칙의 활용범위가 국가 재정은행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과 가치법칙이 북한의 생산력 발전에 실제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처럼 냉전기 가치법칙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력 발전과 계획경제의 합리적 운영 그리고 만성적 공급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되었으며, 성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탈냉전기 7·1조치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림 5>는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7·1조치는 표면적으로 볼 때 개혁적 조치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방경제 중심의 북한식 실리사회주의를 위한 방편이었다.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의 실험이었다. ‘개인에게는 일한만큼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기업에는 생산성 증가분에 따른 이윤을 보장해

84) 김일성, “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김일성저작집』, 제33권(평양: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1987), 545쪽.

<그림 5> 가치법칙의 지속과 변화 - 공산주의 원칙 / 대안체계 / 7·1조치



주는 조치였다. 기업에 해당하는 조치는 경영 자율성 허용, 생산계획 및 지도의 분권화, 물자교류시장 허용 등이며, 개인에 해당되는 것은 ‘화폐임금제’이다.

화폐임금제는, ① 작업수행의 정도에 따른 보수 지급, ② 지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③ 생산결과에 따른 분배로 평균주의를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국가부문에서는 계획경제와 국가 소유제 변화까지도 일부 허용되었다.

우선 내용적 측면을 평가하면 ① 목적 면에서, 냉전기 테제는 공산주의로의 이행, 탈냉전기는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② 내용 면에서는 계획경제 및 소유제도의 원칙 그리고 국가운영 부문까지 자본주의 이윤추구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개인, 기업, 국가경영의 모든 면에서 생산성 기준이 적용되었다. ③ 형식면에서는 형태적 이용의 원칙이 폐기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후퇴를 의미는 것으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변 만큼 분배’하였다. ④ 범위 면에서는 대내외 개혁과 개방이라는 총체적인 체제 내 개혁이 시도되었다.

다음으로 형식적 측면을 평가하면 ① 시장과 개인소유의 공식적 허용, ② 기업의 자율성과 분권화 허용 등 사회주의의 소유제도 및 경제제도의 근본에 해당하는 원칙이 수정되었다. 따라서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7·1조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복구 및 공적부문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비공식경제의 성장을 공식영역으로 흡수하여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개인과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전략의 일환이었다. 강성대국은 주민들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한편 국방경제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실리사회주의로 표방되었다. 그리고

2002년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로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경제영역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고수라는 보수노선의 기초 위에서 전개되었다. ‘선군경제노선’은 사적부문의 생산력을 공적부문으로 흡수하여 공적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복원을 상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한당국의 선택지가 시장화의 수용이외의 다른 것 일 가능성은 적거나 혹은 거의 없다. 즉, 국가존립을 위한 체제개혁은 시장화의 방향에서 매우 탄력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군경제노선은 현상적 변화 이면에 가치법칙을 적용하고자 했던 북한당국의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5. 결론

이 논문은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테제가 북한정책에 어떻게 적용·변화되었는가를 가치법칙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냉전기에는 테제가 공격적 사회발전전략으로 사회 전 분야에 지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었던 반면, 탈냉전기에는 사회주의고수 전략 차원에서 방어적 명분유지 수준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정치체제’는 고수되었고,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체제는 ‘계획과 시장공존’, 즉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되었다.

냉전기 가치법칙은 생산력 발전, 사상투쟁 등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공격적 발전전략으로써, 탈냉전기는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결 등 내부 개혁과 대외개방을 위한 수세적 방어전략으로 활용되었다. 테제는 ‘선군경제노선’에서 내용적으로 후퇴되었지만, 사회주의체제 고수라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수세적으로 계승되었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의 개혁가능성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선군 경제노선은 ‘폐쇄 메커니즘’인 ‘자주의 딜레마’를 ‘개방 메커니즘’인 ‘7·1조치’와 결합시켜 ‘정치체제 고수’와 ‘경제개혁 및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은 매우 점진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혁의 범위 또한 경제체제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공산주의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을 10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시장화는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 아니라는 것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앞으로 60여 년을 사회주의 정체성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둔 것이다. 중국의 구상에 따르면, 중국의 개혁로드맵은 약 40% 지점에 있다. 그리고 현재, 생산력 제고를 위해 향후에도 가치법칙을 확대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체제 내 변화’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할 뿐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 또한 분명하다. 바로 이 점이 북한이 중국모형을 취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북한의 경제난은 중국경제에 편승하기만 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편승전략에 미온적이다. 그렇다고 가장 안전한 중국항로로의 운항을 멈춘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할 것인가의 방법론이다. 그것은 북한정치의 70년 역사를 관통하는 실천이론인 ‘자주’이념과 관련이 있다. 중국경제로의 편승은 자칫 ‘자주’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자주노선의 정치적 명분과 체제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치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북한의 ‘자주’이념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 북한’을 지켜주는 이데올로기이자 통합수단으로 작동되어왔다. 하지만 탈냉전이라는 망망대해의 폭풍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해졌다. 그러한 개혁이 ‘선군경제노선’에 의한 7·1조치였다.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를 시장화하는 전략으로서 국가주도 시장계획경제’모델, 즉 시장사회주의로의 변화가 유력한 선택지이다. 하지만 속도는 보수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실리추구’와 ‘명분고수’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시장화의 성과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한 ‘핵-경제병진노선’이 향후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서는 이글이 밝히지 못한 과제이다. 북한은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병진론사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⁸⁵⁾이라고 평가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⁸⁶⁾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남한과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

85) 『조선신보』, 주체102년(2013), 4월 3일.

86)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2014), 205~211쪽; 그러나 2013년 미중정상회담 이전 5월 22일에는 최룡해를 중국 특사로 파견하여 “6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으며, 6월 15일에는 국방위원회의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16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중대제안’에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임을 다시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 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동북아의 냉전질서가 변화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기전략과 자립적 경제노선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즉, 핵문제를 풀어야 하는 주체는 북한만이 아니다.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이해당사국인 6자회담 국가 역시 주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동북아 차원의 접근과 공동노력이 시급하며, 또한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 접수: 11월 8일 / 수정: 11월 20일 / 채택: 12월 10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7 사회주의경제건설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_____,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철학연구소,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2) 논문

김일성,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 『김일성저작집』, 제42권(평양: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1995).

_____,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기술 혁명과업을 철저히 실현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1994).

_____,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1983).

_____, “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김일성저작집』, 제33권(평양: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1987).

오승일, “현시기 대외무역에서 가치법칙의 옳은 리용은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중요담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연구』, 제2호(루계 제143호, 2010).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연구』, 제1호(1993).

3) 신문

『로동신문』, 2002년 4월 22일,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로동신문』, 2010년 8월 24일.

『조선신보』, 주체102(2013)년, 4월 3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김용순, 『북한의 대미외교행태 분석: 선군리더십의 위기관리』(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8).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서울: 한울, 2008).

이석기 외, 『북한경제재점분석』(KIET산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3-673).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권력체계』(서울: 한울, 2011).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서울: 선인, 2004).

최정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석사논문, 2013).

최완규,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서울: 법문사, 2011).

2) 논문

고유환,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통일논총』(2003).

김백수, “7·1경제관리조치를 통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국제문제논총』, 제15권(2005).

김성주,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통일연구』, 제16권 제2호(2012).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보고서』(2002).

_____, “북한의 탈냉전 발전전략,” 창작과비평사, 『창작과비평』, 제30권 제2호(2002).

_____, “김정일 지도체제의 ‘신노선’과 경제개혁 김정일은 ‘호랑이 등’에 탈 것

- 인가,” 사회평론, 『월간 사회평론의 길』(1995).
- 김연철·박순성, “북한경제관리개혁의 성격과 전망,” 『북한 경제개혁연구』(서울: 후마니타스, 2002).
- 김용현, “196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군사화의 대두,” 『북한현대사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서울: 한울, 2004).
- _____, “1960년대 북한의 위기와 군사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현대북한연구』, 제5권 제1호(2002).
- 김일한,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중국과의 비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2012).
- _____,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재관, “제2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한 여부: 경제/군사안보 영역의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제52권(2007).
- 김태현,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2차 북핵위기시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신아시아』, 18권 1호(2011).
- 박환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대학』, 제47권 제2호(2012).
- 백준기,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변동과 권력재편,” 『북한현대사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서울: 한울, 2004).
- 서유석,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과도기론’에 대한 재인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상반기호(2007).
- 성채기,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39호(2004).
- 손철성, “『독일 이데올로기』 연구: 역사적 유물론의 주요 개념 분석”(서울: 도서출판 영한, 2007).
- 신재인,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망과 한반도에서의 기술-경제협력,” 세종연구소, 『세종연구』, 제98-07호(1998).
- 안희창, “북한의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의 상관관계 분석,”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7권 제2호(2011).

- 양호민,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論의 재고: 고전적 맑스주의에서 소련의 붕괴까지,”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제29집(2004).
- 오승일, “현시기 대외무역에서 가치법칙의 옳은 리용은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유장현, “맑스·레닌·모택동 철학의 비교와 발전,” 목원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현대사상연구』, 8권(1994).
- 이성봉, “자립적 경제발전전략과 북한적 정치체제의 형성과정,” 경남대학교,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1999).
- 이성환, “북한 군사노선 변화의 합리성 고찰과 변화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2007).
- 이수석, “김정은 시대 선군외교와 핵-경제 병진전략,” 『월간북한』, 10월호(2004).
- 이정철,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 평가: 선군 이데올로기의 제도화,”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31호(2010).
- 이현경,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제26권 3호(2011).
- 이황규,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 『익산국민윤리학회보』, 제5권(1993).
- 주봉호, “북한의 사회주의 단계론과 사회주의 사회성격론,”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14집(2000).
- 첸이신, “1984년 이후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론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1989).
- 최명해,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8집 3호(2008).
- 함택영,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문제점,”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경남대학교 출판부, 1993).
- 황병주, “1970년대 유신체제의 안보국가 담론,”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제27호(2012).
-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2014).

3. 국외 자료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A Study of the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Thesis
and the Change of the Policy Line in the Economy
: The Switchover from the Aggressive Development
Strategy to the Defensive Defense Strategy

Jung, Hyun Sook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of
Young Korean Academy)

This paper aims to analyze North Korea’s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thesis and the change of the policy line in the economy.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thesis —based on Juche Idea as the theoretical basis and self-defense in security as the prerequisite— is the socialist development strategy where the strategic value comprises self-sustaining in the economy and self-reliance in politics. It means productivity developments in the economy and the purpose of building communism, and were converted into the aggressive development strategy in the Cold War and the defensive defense strategy reconstructed as the military-

first ideology in the Post-Cold War period. As a result, while ‘a chief magistrate regime-party state socialist system’ is maintained in a political perspective, it is likely that the potential for change into ‘the state-dominated financial system of coexistence of the plan and the market’ is high.

Keywords: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thesis, the law of value, daean systems of business, the military-first economic route, economy·national defense simultaneous strategy route, 7·1 the improvement measures in the economy management, country-led planned market economy